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과거청산 비교 연구*

- ‘정화(lustrace)’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

김 신 규

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슬로바키아의 과거청산 |
| 2. ‘정화’의 개념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상이한 적용 | 5. 결론 |
| 3. 체코의 과거청산 | 참고문헌 |
|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체코(Czech), 슬로바키아(Slovakia), 인적 검증(personal vetting), 과거청산(dealing with the past), 정화(lustration)

국 문 요 약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로 과거청산의 방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잘못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구축하려는 진실 위원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인적인 검증작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체코의 경우는 사법적인 절차, 진실 위원회, 보상, 검증작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특히 검증작업을 통한 인적인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적 청산이 과거와의 단절에서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때문이다.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진실 찾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8년부터 일정부분 논의가 시작되어 2002년 시작된 과거청산의 작업은 이미 민주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적 청산에 대한 기반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청산이 이미 정치적인 게임의 일종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본격적인 사법적인 절차, 보상, 검증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단일 국가 시기부터 공산당에 대해 체코인들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슬로바키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정권 시기에 슬로바키아가 체코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고 또 덜 탄압을 당했기 때문에 공산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327-2007-2-A00127)

당에 대해 그리 큰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정화’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코에서의 정화가 인적 청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에서의 정화는 의도적인 인적 청산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자발적인 청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결국 동유럽 각국에서 시행하는 과거청산은 기존 논의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공산정권의 성격이나 이행의 양식 그리고 ‘현재의 정치’ 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정한 정치문화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공산정권을 경험했던 동유럽 국가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일련의 과거청산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48년부터 1989년까지 유지되었던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탈공산주의 동유럽에서는 과거청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과거청산에 대한 접근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포괄적이며 강력한 과거청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과거청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국가의 경우도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역시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 과거청산을 시도하고 있는데, 1993년 국가가 분리된 이후에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 중에서 체코가 가장 강력한 과거청산을 시행하고 있다면 슬로바키아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과거청산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체코에서 시작된 과거청산은 현재까지도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위 ‘정화(lustrace)’라는 개념으로 통칭되는 체코의 과거청산 방법은 옛 정권의 고위급 인사나 비밀경찰 혹은 그 동조자들이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고위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인사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지난 1993년 체코와 분리 독립하면서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연방법으로 제정되었던 정화법을 유지하면서도 법을 시행하는 기구를 구성하지 않아 과거청산이 문구에 그쳤다. 더군다나 당초 연방 정화법이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에 가서는 이 법령의 시효가 종료되어 2002년까지 과거청산에 관한 어떠한 시도도 나타나지 않았다.

1993년 1월 1일까지 하나의 국가였던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국가분리 이후에 왜 상이한 방식으로 과거청산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의 과거청산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반된 사례가 된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2년부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청산과 관련된 일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체코를 비롯한 주변 동유럽 국가에 비해 뒤늦게 과거청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원인을 파악한다면 과거청산의 시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과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청산에 관한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¹⁾ 과거청산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에 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우선 제2

장에서는 과거청산을 지칭하는 ‘정화(lustration)’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를 통해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상이한 과거청산에 대한 이론적 틀을 모색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체코의 사례와 슬로바키아의 사례에 집중하여 두 사례에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찾는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과거청산의 메커니즘을 공산정권의 특성이나 이행의 유형이 아닌 ‘현재의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슬로바키아의 경우 슬로바키아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과거’에 대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2. ‘정화’의 개념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상이한 적용

이미 헌팅턴(S. P. Huntington)이 언급했듯이, 비민주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소위 ‘고문자의 문제(torturer’s problem)’라는 특별한 이슈가 제기된다. 이에 따르면 신생 민주정부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전 비민주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범죄행위나 인권유린 등에 연루된 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 사회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Huntington 1991, 211).

과거청산의 방법에 대해 코헨(S. Cohen)은 옛 정권의 권력남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며, 인권 유린 행위를 선별적으로 처벌하고 또 일부는 사면, 속죄, 화해 등을 통해 용서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Cohen 1995), 액커만(B. Ackerman)과 엘스터(J. Elster) 등은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에 ‘정화(lustr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옛 정권의 유산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Elster 1998). 또한 휴즈(Luc Huyse)는 비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에서 과거청산 혹은 고문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처벌, 조건 없는 사면, 진실과 화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Huyse 1995).

과거청산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정화’라는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이다.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또 왜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의제로 올려놓고 이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미 엘스터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의 민주화를 분석하면서 비민주적 유산을 청산하는 정책을 예로 들어 특정 인사가 새로운 체제에서 고위 직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정화로 파악하고 있다(Elster 1993, 13).

고블(P. Goble)은 정화의 개념을 특정인을 공직에서 배제시키거나 이전 정권에서의 행동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동일하게 사용한다(Goble 1996). 카스테트(S. Karstedt)는 정화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전 정권의 고위 관료와 당국자들에 대한 처벌과 중하위급 관료에 대한 검증절차라고 정의했다(Karstedt 2002, 16). 한편 오페(C. Offe)는 과거청산의 방법을 보복과 자격박탈로 구분

1) 이미 정치계나 학계에서는 체코의 과거청산이 “새로운 청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나 세계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체코의 과거청산이 인권을 탄압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등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체코의 과거청산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고 자격박탈을 정화와 상응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Offe 1996, 88). 그는 ‘과거-지향 정의(backward-looking justice)’와 ‘미래-지향 정의(forward-looking justice)’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특정 인사가 중요한 정치, 행정 혹은 전문 직위를 차지하게 되면 새로운 민주 정권의 작동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Offe 1996, 93).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화라는 개념은 과거청산의 전반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적인 측면에서의 청산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둘스키(W. Sadulski)는 과거청산 문제에서 정화와 탈공산화(decommunization)를 구분하면서, 정화를 특정 직책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을 검증하는 것으로 그리고 탈공산화를 직책의 후보로 나서는 권리 자체를 빼앗는 것으로 사용했다(Sadulski 2005, 245). 사르노타(A. Czarnota)는 정화를 ‘검증(vetting)’, ‘옛 비밀 파일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리고 ‘탈공산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Czarnota 2009).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정화를 협의로 정의해 “인적인 측면에서의 과거 청산으로 인식하며 특정 인사들이 특정 공직을 유지하거나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검증’ 절차로 파악한다.” 정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탈공산화의 개념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정화의 핵심적인 목표가 과거 인사를 검증하고 배제함으로써 공산정권의 유산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공산화 역시 인적인 청산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왜 특정 국가에서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정화를 추진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왜 비교적 늦게 정화를 채택했는지에 대한 측면이다.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 중에서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미 1990년과 1991년부터 과거청산에 집중하면서 특정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비밀 파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그러나 반면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의 경우는 아주 늦게 정화 과정을 시작했으며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체코나 동독에 비해 아주 온건하고, 법적인 규제가 없지만 일정부분 인적 청산이 부수된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과거청산을 사례별로 구분해 분석하는 시도는 많았다. 특히 이러한 연구에서는 과거청산과 정화의 원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 과거청산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배경에서 과거청산이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형성되었는가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헌팅턴은 ‘탈출의 양식(mode of exit)’, 즉 비민주정권이 민주정권으로 이행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에 따라 과거청산이 실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헌팅턴은 권위주의 정권의 관료들을 처벌하든지 아니면 용서하고 잊을지에 관한 정책은 탈출의 양식, 즉 이행의 유형에 따라 예측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만약 비민주 정권이 협상을 통해 붕괴되었다면 과거청산에 대한 열망이 덜 할 것이고 반대파에 의해 붕괴되었다면 이전 정권에 대한 청산과 인적인 처벌 열망이 클 것이다(Huntington 1991, 228).”

문크(G. L. Munck)와 레프(C. S. Leff) 역시 과거청산의 방향과 그 범위가 이전 정권의 특성과 이행의 양식(mode of transition)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고 있다(Munck and Leff 1997). 즉, 어떻게 공산정권이 몰락했는지, 즉, 이행의 양식에 따라 과거청산이 실시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모란(J. P. Moran) 역시 이전 정권이 어느 수준까지 반체제 세력을 용인했는지를 통해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만약 옛 정권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들을 용인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국가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의 압박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Moran 1994).

웰시(H. Welsh)의 경우에는 공산정권의 특성이나 이행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정치’가 과거청산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파악했다. 웰시는 공산정권이 붕괴된 이후 실시된 첫 번째 자유선거에서 옛공산당 혹은 계승정당의 승리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웰시는 과거청산의 조건을 “공산정권이 붕괴 직전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협상을 거치지 않은 채 이행이 진행되며, 첫 번째 선거에서 공산당 혹은 계승정당이 패배했을 경우”라고 보았다(Welsh 1996). 슈체르비악(A. Szczerbiak)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대한 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 세력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일부 정치인들에게 더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Szczerbiak 2002).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결국 과거청산의 시행 여부와 그 강도와 내용 그리고 시행의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산정권의 특성, 이행의 양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상이한 과거청산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논의뿐만 아니라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공산정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과거청산을 실시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건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에서 시행된 과거청산의 엄격성과 시기를 통해 동유럽 국가를 다음 네 가지 국가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Stan 2006). 첫 번째 국가군은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강력한 과거청산을 시도한 경우이다. 이들은 정화, 비밀문서에 대한 접근, 법적인 절차 진행 등을 강력하고도 빠르게 진행했다. 동독의 경우는 1990년 8월 과거 비밀경찰과의 동조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는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과거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도록 했다.

두 번째 국가군에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속한다. 이들은 과거청산의 규모 면에서 온건한 방법을 선택했으며 시기 면에서는 앞선 동독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보다 뒤늦었다. 헝가리는 1994년 3월 “일부 고위직 검증에 관한 법(Act XXIII of 1994)”을 제정했다.²⁾ 이 법안은 과거 비밀경찰 요원들에 대한 행적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법안에 따라 의회와 각료, 연방 은행장과 부행장, 외교관, 군 장성, 헝가리 라디오, TV, 헝가리 뉴스 서비스의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편집장, 경찰국장, 국립대학의 총장, 학장, 학과장, 판사, 지역 변호사, 일간지, 주간지 편집장, 국영기구 책임자, 국영은행, 재정기구, 보험사 사장 등이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 1996년에는 법안을 개정해 의회나 대통령 앞에서 선서한 1972년 2월 14일 이전 출생자 공직자 전원에 대한 검증을 명문화시켰다.

2) "Act XXIII of 1994 on the Screening of Holders of Some Important Positions, Holders of Positions of Public Trust and Opinion-Leading Public Figures, and on the Office of History"; <http://www.th.hu/html/en/torv.html>;

폴란드의 경우는 1997년 3월 정화법을 통과시켜, 비밀경찰과의 과거 공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통령, 의원, 내각, 판사, 검사, 대통령이나 총리, 검찰 총장에 의해 고위직에 임명된 자 등과 그 후보자들이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비밀경찰(SB)과 공모 혹은 연루 사실 없음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해야 했는데,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은 10년간 상기한 직위를 차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2006년 11월에 1997년 법안을 개정해 고위 관료, 판사, 교사, 언론인, 외교관, 시장, 국영기업 사장, 편집장, 편집인, 교장 등은 비밀경찰과의 연루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검증 기록을 일반에 공개하고 만약 비밀경찰과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해고하도록 했다.

세 번째 국가군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과거청산의 방법을 바꾸면서 뒤늦게 과거청산을 시작한 경우이다. 루마니아의 경우 189/1999년 법안을 통해 비밀경찰과의 연루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비밀경찰 혹은 정보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³⁾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는 비밀경찰과의 연루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현재의 공직을 잃지 않게 했다. 불가리아는 1992년 소위 ‘파네프 법(Panev law)’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 인사들에게 공산당 정치국원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했으며,⁴⁾ 1997년 행정부에 관한 법(Law on Public Administration)을 통해 옛 공산당 정치국원들은 향후 5년간 고위 공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와 같이 과거청산을 전혀 시도하지 않거나 혹은 시도한다 해도 ‘용서와 잊기’를 선택한 경우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1992년까지 체코와 단일 국가를 이루면서 동일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분리 이후 체코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 국가는 과거 공산정권의 특성, 이행의 과정이 모두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의 도입 시기와 범위 및 처벌의 수위 등에서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상이한 과거청산은 공산정권의 특성과 이행의 양식이라는 측면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전의 연구에서 논의된 공산정권의 특성과 이행양식 이외의 다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아래의 3장과 4장에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과거청산과 정화를 구분해 살펴본다.

3. 체코의 과거청산

1989년 12월 29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하벨(V. Havel)은 취임 직후 내무장관을 통해 공산정권 시기에 활동했던 비밀경찰과 그 협력자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1990년 6월로 예정된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이에 발발했고 후보자 검증을 거부했다(Nedelsky 2004, 70). 1990년 선거에서 체코의 시민포럼(Občanské Fórum)과 슬로바키아의 반폭력대중(Verejnost proti Nasiliu)이 완승을 거두면서 이전 정권에 대한 보다 체

3)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article.shtml?cmd%5B347%5D=x-347-559498>

4) <http://assembly.coe.int/Documents/WorkingDocs/doc96/EDOC7568.htm>

계적인 검증과 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1991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회에서는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에서는 연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비밀경찰과의 연루 사실을 검증했고, 이에 대해 연루 사실이 밝혀진 의원들은 보름 이내에 자신의 연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러한 검증 작업은 1991년 ‘정화법’으로 구체화되었다.

흔히 체코의 정화법은 대규모 정화법과 소규모 정화법으로 구분하는데, 대규모 정화법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과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특정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법(Act No. 451/1991)이며,⁵⁾ 소규모 정화법은 “체코의 경찰과 군부에서 특정한 직책 수행을 위한 기타 전제조건에 관한 법(Act No. 279/1992)이다.⁶⁾ 일반적으로 체코의 정화법은 1991년의 대규모 정화법을 언급하는데, 당초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1996년 개정으로 5년간 시효가 연장되었다가 2000년 개정으로 시효를 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체코 정화법은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강력한 정화법인 동시에 가장 철저한 정화법으로 알려져 있다(Skapska 2003, 199-202; Robertson 2006, 73).

정화법의 제1조 1항에서는 대상이 되는 분야와 직책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위직을 맡을 인사들의 과거경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대상이 되는 직업은 다음과 같다. a) 연방공화국 및 개별 공화국의 국가 행정직(1993년부터는 체코공화국)⁷⁾, b) 군대(장성급과 영관급), c) 연방 정보부, 연방 경찰 및 대통령 근위대, d) 개별 공화국 대통령 사무국, 연방의회, 개별 공화국 의회 사무국, 개별 공화국 행정부, 연방 헌법재판소 및 개별 공화국 헌법재판소, 연방 대법원 및 개별 공화국 대법원, 체코슬로바키아 과학아카데미 최고 위원회 및 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 최고위원회, e)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 및 개별 공화국 라디오 방송국, 체코슬로바키아 텔레비전 및 개별 공화국 텔레비전 방송국, 체코슬로바키아 언론 위원회 및 개별 공화국 언론 위원회, f) 국영기업, 정부 산하기구, 국가가 최대주인 주식회사, 무역회사, 철도청, 국가기금, 국가가 출자하는 중앙은행 및 이하 언급하지 않는 모든 고위 직위.

정화법 2조에서는 정화법의 적용대상 기간을 1948년 2월 25일부터 1989년 11월 17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간은 공산정권이 집권하던 기간이다. 정화법에서는 특히 공직제한 대상자를 공산당 고위직이나 비밀경찰로 복무한 자 혹은 협력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를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항) 이 기간 중에 비밀경찰로 근무한 자, 2항) 이 기간 중에 비밀경찰에 근무한 기록이 남아 있는 자 혹은 혐의가 있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나 비밀경찰과 공모한 자, 3항) 이 기간 중에 의도적으로 비밀경찰에 협력한 자, 4항) 이 기간 중에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혹은 슬로바키아 공산

5) Zákon č. 451/1991 Sb., kterým se stanoví některé další předpoklady pro výkon některých funkcí ve státních orgánech a organizacích České a Slovenské Federativní Republiky, České republiky a Slovenské republiky; 이 법은 1991년 10월 4일에 통과되었다.

6) Zákon č. 279/1992 Sb., o některých dalších předpokladech pro výkon některých funkcí obsazovaných ustanovením nebo jmenováním příslušníků Policie České republiky a příslušníků Vězeňské služby České republiky; 이 법은 1992년 4월 28일에 통과되었다.

7) 1991년 당시 국명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었다. 그렇지만 1993년 1월 1일을 기해 양 공화국이 분리해 개별 국가가 되었고, 체코공화국에서는 1991년 제정한 소위 ‘정화법’을 이전 연방공화국 당시의 내용으로 그대로 유지했던 반면, 슬로바키아에서는 정화법을 슬로바키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다.

당에서 고위급 서기로 근무한 자, 공산당 정치국원 및 개별 지역 정치국원. 단 1968년 1월 1일에서 1969년 5월 1일까지 상기한 직위에 근무한 자는 예외로 한다. 5항) 보안대에 근무한 자, 6항) 인민군 장교, 7항) 1948년 2월 25일 이후 민족전선 행동 위원회 그리고 1968년 8월 21일 이후 정상화 위원회에 참여한 자, 8항) 소련 군사학교 및 소련 내무부 관료 양성소 등에서 교육받았던 자 혹은 상기한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대학원 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 등이다.

상기한 2조 3항에서 언급된 비밀경찰에 협력한 자의 경우는 비밀경찰의 문서에 확실한 협력자로 기록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거나, 확실히 비밀경찰과 공모한 자 및 보안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비밀경찰에 협조하거나 혹은 정보를 제공한 자를 의미한다. 비밀경찰의 관련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모두 비밀경찰에 협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정화법에서는 비밀경찰의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비밀경찰에 협력한 사람으로 가정하는 점인데, 후에 이 조항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로써 정화법의 존재가 논의되기도 했다.

정화법의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공산정권 시기 반체제운동을 주도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하벨과 같은 민주투사들도 비밀경찰 파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우선은 비밀경찰과 협력한 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전 총리 파로우벡(Jiří Paroubek)의 경우도 총리로 지명된 당일 언론에 총리의 이름이 비밀경찰 파일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⁸⁾

따라서 정화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2조 3항)의 ‘의도적으로 비밀경찰에 협력한자’라는 조항은 우선적으로는 비밀경찰 파일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2조에서는 정화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상기한 자들의 행위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는 그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인권이나 권력남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화법 3조에서는 비밀경찰 이외에 국가 고위직을 맡을 수 없는 조건을 상세히 예시하고 있는데, 우선 연방 내무부, 연방 정보부, 연방 경찰, 대통령 경호실 등의 근무자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정시키고 있다.

1항) 국가 정보부에서 방첩활동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한 자, 2항) 정보부의 책임자 혹은 부서장급 이상, 3항) 소련 군사학교 및 정보학교에서 교육받은 자 혹은 동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자, 4항)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혹은 슬로바키아 공산당 위원회 비서 및 중요 위원회 회원이었던 자, 정치교육을 담당했던 자, 내무부에서 교육문화, 선전선동을 담당했던 자 등이다.

한편 기간이 1948년 2월에서 1989년 11월로 한정되어 있지만, 1968년 1월부터 8월까지 소위 ‘프라하의 봄’ 개혁운동 기간에 상기한 직을 수행한 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자들이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서류는 내무부나 혹은 위원회, 법원 등에서 발급하는데,

8) 파로우벡은 자신의 입장과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공식 검증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이름이 비밀경찰 명부에 올랐던 것은 다만 1970년대 당시 비밀경찰이 자신을 3번 정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4조와 5조에서는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발급기관과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제4조 1항에 따르면 시민들이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조의 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즉 공산당 고위 간부였거나, 비밀경찰 혹은 그와 연루된 자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한 내무부 발행 증명서를 첨부해 입증해야 한다. 제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1항) 시민들은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조의 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해 입증해야 한다. 2항) 시민들은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해 2조 3)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판결을 첨부해야 한다. 3항) 시민들은 2조의 4)항에서 8)항까지의 진술서를 첨부해 증명해야 한다. 4항) 시민들은 1조에 언급된 직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정보부나 혹은 경찰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5조에 따르면 1조에 언급된 고위직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내무부 발행 증명서나 혹은 신고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상술하고 있으며, 6조에서는 내무부나 법원 혹은 심사위원회에서는 시민이나 혹은 단체가 요청한 증명서나 판결문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6조에 따르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나 기타 단체장의 경우는 일단 선출된 이후 직책유지를 위해서 30일 이내에 증명서나 판결문 등의 발급을 내무부나 법원 혹은 위원회 등에 요구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증명서나 판결문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출된 자가 30일 이내에 증명서나 판결문 등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장은 30일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내무부 등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해당 인물이 직책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야할 의무가 있다.

한편 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장관, 검찰총장 등도 예외 없이 직책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지 30일 이내에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내무부는 일반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8조와 9조에서는 직책유지 혹은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이 증명서 혹은 판결문 등의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는 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200크라운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자에게 직접 증명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증명서나 판결문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내용은 비밀이 아니며, 발급을 요청한 개인뿐 아니라 증명서가 필요한 기관 등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 혹은 판결문을 발급하는 내무부에서는 해당 개인의 과거 전력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한다. 11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내무부 산하기관이지만, 내무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기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수는 모두 9명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1명은 의회의장이 임면권이 가지고 있으며, 내무부에서 2명, 정보부에서 1명, 의회에서 3명을 임명한다.

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지만, 소송에 관련된 개인의 경우 문서화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이 자료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신청

을 받아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용증명을 하며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이를 재심한다.

한편 이렇게 심의한 내용에 따라 해당 개인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게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개인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결과에 불응할 경우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에서는 개인이 위원회나 혹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60일 이내에 결정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에서는 결과의 공표를 위해서는 언론사, 방송가, 출판사 등이 내무부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비밀 파일에 대한 접근 역시 체코는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인 방안을 선택했다. 우선 1996년 ‘비밀파일 접근법(Act. 140/1996)’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제3자의 이름은 지워야 한다. 또한 2002년 3월 ‘비밀파일 포괄 접근법(Act. 107/2002)’에서는 성인시민들(18세 이상)은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비밀경찰 협력자들의 파일, 비밀경찰의 개인 파일 그리고 비밀경찰이 모니터하여 기록한 자들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2004년 <Act 499/2004>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은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David 2006).

체코에서는 이러한 법령 이외에도 공산주의시기에 자행된 범죄를 조사, 기록하는 특별 위원회를 내무부 산하에 설치했는데, 1995년 설립된 <공산주의 범죄행위 조사 및 기록위원회(Úřad dokumentace a vyšetřování zločinů komunismu)>가 그것이다. 조사 및 기록위원회는 공산주의 시기 동안 행해졌던 각종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기록하며, 그에 연루된 인사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경찰청 산하기구로 재편되어, 공산정권 기간 중에 행해졌던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기록을 담당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첫째, 1948년 2월에서 1989년 12월 29일까지 있었던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며, 둘째, 1945년 1월부터 1989년 12월 29일까지 공산정권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문건들을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조사위원회의 공식 발간물을 준비하는 업무도 수행한다.⁹⁾

조사위원회에서도 역시 공산정권과 비밀경찰의 범죄행위에 주목하고 있는데, 2005년 7월 까지 모두 94건의 형사고발을 통해 187명을 처벌했고, 현재 111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지난 1993년 7월 9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법령 198/1993’으로

9) 첫째 임무와 둘째 임무간의 기간차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48년 2월 25일은 공산당이 무혈 쿠데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당독재 통치를 시작했던 날짜이고, 1945년 1월 1일은 해방직전 공산주의 세력이 국내에 득세하던 시기로 이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테러나 몰자징수 및 살인, 방화 등의 범죄가 많았다. 따라서 위원회의 첫 번째 목적에 나와 있는 시기인 1948년 2월 25일부터 공산정권이 공식적으로 붕괴된 1989년 12월 29일까지는 공산정권과 관련된 각종범죄 행위를 공식 발표하여 이를 토대로 그들의 범죄행위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의지이며, 두 번째 목적에 명기된 날짜인 1945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29일까지는 사법 처벌은 불가능지만, 이와 관련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며 공산주의자들의 당시 행위를 역사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 법령에서는 공산정권이 불법이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령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과 그 지도부들이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1948년에서 1989년 사이에 벌여졌던 통치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법령에 따르면 공산당의 통치 40년간은 범죄성, 비정통성 등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공산당은 시민들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으며, 정권의 행동에 조건 없이 동조하도록 강조했고 무고한 이들을 박해했으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적과 협력했다고 비판했다. 법령에서는 또한 공산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은 정당했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존경받을 만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에서는 공산정권하에서의 통치과정을 기록하며, 1945-89년 사이 전체주의 체제하에서의 공산당 인사들의 불법적인 역할과 행동을 조사하고 있다.

체코에서의 이러한 일련의 과거청산과 정화 작업은 처음 법령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체코 정당체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과거청산과 정화가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논리로 해석되고 있는데, 특히 민주계 정당들과 공산당 간에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체코 과거청산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과거청산과 정화를 시행할 자료의 부정확성을 들 수 있다. 공산정권과 비밀경찰에 의해 기록된 비밀문서의 상당부분이 이미 훼손되어 있고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청산과 정화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행적에 대한 부정확성과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를 이용해 정적을 공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당시 총리였던 토쇼프스키(J. Tošovský)와 체코 TV 사장 등이 공산정권 시기에 비밀경찰과 협력했거나 인민군 소속이었다고 기소되기도 했으며¹⁰⁾, 최근에는 반공산주의 혁명의 주역이자 상원의원인 디엔스트비에르(J. Dienstbier) 등이 비밀경찰과의 연루설에 시달리고 있다.¹¹⁾ 이러한 사실은 비밀경찰과의 연루 사실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적들 간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청산과 정화의 불완전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Rosenberg 1995; Šiklová and Havel 1999).

상기한 체코 정화법의 전체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체코 정화법은 한시법이 아니라 상시법이다. 둘째, 정화법에 의해 과거의 행적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직위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위도 보장받지 못한다. 셋째, 체코 정화법은 일부 압력에 의한 불법 행위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행해진 불법 행위와 자발적이거나 장기적인 위법행위와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인사들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체코 정화법이 동유럽의 과거청산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철저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선출직’에 대해서는 정화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체코의 정화법은 공산정권이 몰락한 바로 그 시점에서 제정됨으로써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Kosař 2008, 470-472).

10) "Tošovský spolupracoval s StB," MF Dnes (12 Feb. 2007), "Rada ČT podržela Janečka i bývalého milionáře," *Hospodářské noviny* (22 Feb. 2007); "Nohavica a StB: nová fakta," *Lidové noviny* (10 Feb. 2007).

11) www.tyden.cz/rubriky/domaci/dienstbier-tajna-sluzba-me-nikdy-ani-nekontaktovala_166771.html

4. 슬로바키아의 과거청산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체코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선택했다. 1993년 국가분리 이후에도 체코 슬로바키아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정화법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이러한 정화법을 시행할 제도와 기구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정화법은 유명무실한 상태였고 과거청산 시행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발과 대중들의 무관심 또한 체코보다 훨씬 더 강했다.

국가분리 이후 6년 동안, 공산주의자였던 메치아르(V. Mečiar)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슬로바키아운동(HZDS)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었다. 1991년 2월 슬로바키아 의회에서는 인적 청산을 위한 검증 작업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할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메치아르는 과거청산을 위한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1991년 5월에도 의원들과 관료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요구하는 결의가 시도되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지는 못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정화법은 슬로바키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적용이 아닌 공식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민주체제로의 이행 이후에 이전 정권의 엘리트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을 경우 과거청산이 실시되지 않는다(Elster 1998; Huyse 1995, 51). 실제로 1993년 국가가 분리된 시점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던 메치아르 정부는 1993년 11월까지 HZDS 단독으로 그리고 1993년 11월부터 1994년 3월까지 민족당(SNS)과의 최소승리내각을 구성하면서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메치아르가 실각하면서 반메치아르 진영이 1994년 3월에서 12월까지 구성한 내각은 소수내각에 불과했다. 1994년 12월 다시 집권에 성공한 메치아르는 1994년 12월에서 1998년 10월까지 세 번째 집권에서 노동자연맹(ZRS), SNS와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전체 150석의 의석 중에서 82석을 확보하여 과거청산에 대한 요구를 막고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도 허용하지 않았다.

<표 1> 1990-2006년 슬로바키아 의회선거와 연립구성

1992년 SNR 선거			1994년			1998년			2002년			2006년		
정당	의석	득표율	정당	의석	득표율	정당	의석	득표율	정당	의석	득표율	정당	의석	득표율
HZDS	74	37.26	HZDS -RSS	61	34.96	HZDS	43	27.00	HZDS	36	19.50	SMER	50	29.14
SDL	29	14.70	SV	18	10.41	SDK	42	26.33	SDKU	28	15.09	SDKU	31	18.35
KDH	18	8.89	MK	17	10.18	SDL	23	14.66	SMER	25	13.46	SNS	20	11.73
SNS	15	7.93	KDH	17	10.08	SMK	15	9.12	SMK	20	11.16	SMK	20	11.68
Eg/MKDH	14	7.42	DU	15	8.57	SNS	14	9.07	KDH	15	8.25	HZDS	15	8.79
			ZRS	13	7.34	SOP	13	8.01	ANO	15	8.01	KDH	14	8.31
			SNS	9	5.40				KSS	11	6.32			
기타	0	23.8	기타	0	13.06	기타	0	5.81	기타	0	18.21	기타	0	12.00

출처 : “Štatistický Úrad SR, Volby 1992, 1994, 1998, 2002, 2006.” <http://www.statistics.sk>

<표 2> 슬로바키아 연립내각 구성과 특성

내각	기간	참여정당	특성
메치아르 2차내각	1992년 6월 ~ 1993년 11월	HZDS	소수내각
	1993년 11월 ~ 1994년 3월	HZDS + SNS	최소승리내각
모라브척 매각	1994년 3월 ~ 1994년 12월	SDL' + KDH + APR +ADSR + NDS-NA	소수내각
메치아르 3차내각	1994년 12월 ~ 1998년 10월	HZDS + ZRS + SNS	최소승리내각
쥬린다 1차내각	1998년 10월 ~ 2002년 10월	SDK + SDL' + SMK + SOP (+ KDH)	다수내각(이 후에 최소승리내각)
쥬린다 2차내각	2002년 10월 ~ 2003년 11월	SDKU + SMK + KDH + ANO	최소승리내각
	2003년 11월 ~ 2006년 7월	SDKU + SMK + KDH + ANO	소수내각
피초 내각	2006년 7월~ 2010년	SMER + SNS + HZDS	최소승리내각

출처 : 김신규, 2009

메치아르 정부는 이미 1993년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에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정화법이 인권과 자유현장에 상치된다고 청원해서, 정화법을 자체를 폐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시기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문제를 심의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정화법이 기본권 현장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함으로써 정화법 폐기를 주장하는 메치아르 정부의 청원을 기각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정권의 불법성과 반공산정권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2조에서는 공산정권은 범죄, 불법, 경멸적인 정권이며,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범죄기구이며, 경멸할 만한 기구라고 선언했다. 이 법안은 1996년 수정되어 공산당을 범죄조직이라고 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당원들의 범죄행위를 막지 못한 정당”이라고 규정했다.¹³⁾

결국 메치아르를 비롯해 과거청산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기존 연방 정화법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데 필요한 제도나 기구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방기함으로써 정화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슬로바키아는 아주 엄격한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정화법을 계승하고 있었고 만일 국가 분리 이후 체코와 마찬가지로 과거청산을 시행할 담당 기구가 설립되었다면 체코와 유사한 방향으로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메치아르에 의해 정화법

12) “Survey or Slovak Press,” *CTK Czech News Agency* (Dec. 28, 1993).13) “Slovak Parliament Approves Anti-Communist Law,” *OMRI Daily Digest* (5 February 1996) <http://www.rferl.org/newsline/1996/02/3-cee/cee-050296.html>

시행이 가로 막힌 상황에서 슬로바키아의 정화법은 사문법에 불과하다가 결국 1996년 자동 폐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약 메치아르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면 슬로바키아에서도 체코와 유사한 정화법이 시행되었을지를 예측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의 상황은 이러한 가설에 부합되지 않는다. 메치아르는 1998년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고 1998년 총선을 통해 권력에서 물러났다. 메치아르가 정화법 시행을 막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메치아르가 물러난 1998년에는 체코와 유사한 정화법이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슬로바키아에서 정화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법안이 시행된 것은, 메치아르가 정권을 잃은 지 4년이 지난 2002년에 가서였다(Kaminski and Nalepa 2006).¹⁴⁾

1998년 총선에서 승리한 미쿨라쉬 쥬린다(M. Dzurinda) 주도의 4당 연립 역시 과거청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메치아르에 가장 반발했던 기독교민주당(SDK)의 차르노구르스키(J. Čarnogurský)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과거청산 문제가 슬로바키아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차르노구르스키는 과거청산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나머지 두 정당인 민주좌익당(SDL)과 시민이해당(SOP)이 과거청산을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SDL 의원들은 대부분 과거에 공산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쥬린다 정부가 정화법을 제정하려 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으며, SOP 역시 과거청산의 법제화에 반대했다.¹⁵⁾

과거청산을 법으로 규정하려 했던 시도가 막히자 1999년 11월 차르노구르스키는 법무부 산하에 단 두명의 직원을 두는 <공산주의 범죄 기록부(Department for Documentation of the Crimes of Communism (ODKZ))>를 설립하는데 만족했다(Kunicová and Nalepa 2006, 21). 메치아르가 실각한 이후에 결성된 쥬린다 연립정부 역시 과거청산을 시도할 수 있는 명확한 의지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다. 총리 쥬린다는 과거청산 문제를 둘러싼 연립정부 내의 갈등 양상을 “우리(연립정부)는 사회의 더 많은 분극화에 기여하고 있다”¹⁶⁾고 말하기도 했다.

2002년 8월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쥬린다 내각은 SDL과 SOP의 연정탈퇴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으며 <민족기억위원회(Ústav pamäti národa)>의 설립을 규정한 ‘민족기억법(553/2002 zákon)’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비밀 문건에 대한 접근 법 그리고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o sprístupnení dokumentov o činnosti bezpečnostných zložek šátu 1939 - 1989 a o založení Ústavu pamäti národa a o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으로 일명 ‘민족기억법(zákon o pamäti národa)’으로 알려져 있는데, 1939년 4월 18일에서 1989년 12월 31일 사이 국가보안부의 행위와 관련된 문건을 공개하고 기억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에 따라서 슬로바키아 시민과 외국인도 그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비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다만

14) 옛 공산주의자들이 1992년에서 1998년까지 슬로바키아에서 집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슬로바키아에서 정화가 시행되지 않았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될 수 없다. 다른 탈공산주의 유럽 국가에서는 공산당 계승정당이 입법 과정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과거청산이 시도되었었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가 그러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산당 계승정당이 권력을 잡았던 당시 최초의 정화법이 통과되었었다.

15) “Lustration Processes Over in Slovakia,” ČTK Czech News Agency (Sept. 29, 2000).

16) “Lustration Processes Over in Slovakia,” ČTK Czech News Agency (Sept. 29, 2000).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내용 그리고 옛 공산주의 정치 경찰에 의해 탄압된 사람들의 개인적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었다.¹⁷⁾

이렇게 슈린다 내각은 임기 종료의 시점에서 연정붕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족기억법’을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SOP나 SDL과는 다른 노선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차기 총선에서 메치아르의 재등장을 견제하는 정치적 전술을 선택했다. 이미 2002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슈린다는 민주기독연합(SDKÚ)의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모색했을 것이다. 슈린다의 선택은 연립정부 자체에 대한 총선 심판이 아니라 반-메치아르 연대로서 그리고 친-민주 개혁의 추장자로서 SDKÚ의 정책을 강조하여 총선에 대비하려는 의도였다.

이 법안에 대해 SOP 소속의 당시 대통령 슈스터(R. Schuster)가 비토권을 행사했지만 의회 재표결이 진행되면서 SDL과 SOP 소속 의원들도 ‘민족기억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2002년 총선을 한달 앞두고 실시된 표결에서 SOP 소속 8명의 의원 중 4명이 법안에 찬성했고, SDL 소속 18명의 의원 중 17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이는 2002년 총선에서 SDKÚ의 승리와 SDL과 SOP의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2년 이후 더 강력한 정화법이 제정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SOP와 SDL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⁸⁾

이렇게 통과된 ‘민족기억법’은 옛 정권과 비밀경찰 인사와 협력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본격적인 의미에서는 과거청산이라고 볼 수 없다.¹⁹⁾ 검증을 통한 인적 청산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들에 대한 처벌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기억위원회>를 통해 비밀경찰과 협력한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회의장 흐루쇼프스키(P. Hrušovský)를 비롯한 정치인, 관료, 종교인 등이 공직에서 물러났다.²⁰⁾ 즉, 법적인 검증과 처벌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검증과 처벌이라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슬로바키아는 체코보다 뒤늦게 과거청산을 시도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다만 메치아르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슬로바키아에서 과거청산 시도를 막았다고 한다면, 그가 실각한 1998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과거청산이 시작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민족기억법’이 통과된 시점은 메치아르가 정권을 잃은 지 4년이 지난 2002년이였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에서 과거청산이 시작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메치아르가 아닌 다른 요인일 것이다.

과거청산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선택이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만일 유권자들이 과거청산에 찬성한다면 그들은 과거청산에 적극적인 정치인들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슬로바키아 유권자들이 과거청산에 별다른 지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청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치인들이 정계에 진출했고 결국 슬로바키아에서의 과거청산이 체코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Kunicová and Nalepa 2006, 25).

1993년 MVK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슬로바키아인 절반 이상은 연방 정화법이 슬로바키아

17) 553/2002 zákon; http://www.upn.gov.sk/data/pdf/553_2002.pdf

18) 2002년 총선에서 SDL은 3.32%의 지지율을 얻어, 5% 봉쇄조항을 넘어서지 못했고, SOP는 총선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http://app.statistics.sk/volby2002/webdata/vysledky.htm>

19) 553/2002 zákon.

20) <http://www.upn.gov.sk/>

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했고 2005년 3월 <민족기억위원회>가 옛 비밀경찰 협력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 여론 조사에서는 82%의 응답자들이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자신들의 공직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았다.²¹⁾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점이다. 1993년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된 첫해였으며, 2005년은 유린다 2차 내각 마지막 기간이었다. 1993년에는 과거청산에 대해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이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으며 2005년 유린다 2차 내각 당시에는 이미 ‘민족기억법’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 의심스러운 인사들이 정치계에서 물러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인들이 과거청산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결국 유권자-정당 연계 혹은 편성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한가지 대안은 옛정권의 정통성 수준에 대한 측면이다. 네델스키(N. Nedelski)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정통성 수준 차이를 논의하면서 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정권에 대한 반대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인들은 과거 공산정권 시기 동안 체코인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 공산정권에 의한 숙청이나 처벌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공산정권 당시 슬로바키아인들은 반체제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슬로바키아인들에 대한 탄압도 체코인에 대한 탄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했다. 1970년대 정상화 시기 고위직을 차지한 슬로바키아 정치인들이 추진한 경제발전 역시 슬로바키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인들은 공산정권에 대한 반대가 심하지 않았다. 즉, 슬로바키아는 체코보다 공산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Nedelsky 2004, 81-85).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슬로바키아의 뒤늦은 과거청산의 요인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과거청산을 반대했던 메치아르의 존재, 둘째, 과거청산에 대한 정치인들의 무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산정권에 대한 슬로바키아인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슬로바키아의 과거청산이 뒤늦었던 것은 체코와는 상이한 슬로바키아의 전통적인 정치문화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로 과거청산의 방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잘못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구축하려는 진실 위원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인적인 검증작업 등으로 구분된다(Oskar et. al. 2008). 이 중에서 체코의 경우는 사법적인 절차, 진실 위원회, 보상, 검증작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특히 검증작업을 통한 인적인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적 청산이 과거와의 단절에서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때문이다.

21) MVK Opinion Poll, *ISI Emerging Markets* (March, 29, 2005).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진실 찾기에 집중되어 있다. 1998년부터 일정부분 논의가 시작되어 2002년 시작된 과거청산의 작업은 이미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적 청산에 대한 기반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청산이 이미 정치적인 게임의 일종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본격적인 사법적인 절차, 보상, 검증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공산정권과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던 메치아르 정권 시기(1991-1998)와 피초 정권(2006-2010) 시기 동안 과거청산에 대한 측면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이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이 전개되지 않았다. 반면 1998년에서 2006년까지의 소위 중도우파 정권 시기에는 그나마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다. 이 시기 중에도 역시 소수 정당의 연립 구성으로 인해, 연립내각의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체코와 같은 포괄적이고 강력한 과거청산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청산은 슬로바키아의 정통성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공고화, 법치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논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리고 정권을 잡기위한 전술적인 측면이 강해 보이며, 메치아르에 강력히 반대하는 차르노구스키를 비롯한 일부 인사에 의해 추진된 성격이 강하다.

더군다나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단일 국가 시기부터 공산당에 대해 체코인들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김신규 2010, 60). 슬로바키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정권 시기에 슬로바키아가 체코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고 또 덜 탄압을 당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해 그리 큰 적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정화’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코에서의 정화가 인적 청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에서의 정화는 의도적인 인적 청산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자발적인 청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결국 동유럽 각국에서 시행하는 과거청산은 기존 논의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공산정권의 성격이나 이행의 양식 그리고 ‘현재의 정치’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정한 정치문화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신규(2010). “인적 과거청산 - 중동부유럽의 정화(lustration).” 『국제지역정보』. 168. pp. 54-60.
- 김신규(2009). “슬로바키아 정당체제의 제도화 : 선거제도와 정당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3. pp. 27-48.
- Cohen, Stanley(1995). “State Crimes of Previous Regimes: Knowledge, Accountability, and the Policing of the Past.” *Law and Social Inquiry*. 20. pp. 7 - 50.

- Czarnota, Adam(2009). "Lustration, Decommunisation and the Rule of Law." *Hague Journal of the Rule of Law*. 1. pp. 307-336.
- David, Roman(2006). "Lustration Laws in Action: The Motives and Evaluation of Lustration Policy in the Czech Republic and Poland (1989 - 2001)." *Law & Social Inquiry*. 28/2. pp. 387-439.
- Elster, J.(1998).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Justice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rchives Europeenes de Sociologie*. 39/1. pp. 7-48.
- Goble, P.(1996). "Analysis from Washington-Toward Collective Innocence?"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FE/RL) Report*. May.
- Huntington, Samuel(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Huyse, Luc(1995). "Justice after transition: on the choices successor elites make in dealing with the past." *Law and Social Inquiry*. 20/1. pp. 51-78.
- Kaminski, Marek M. and Nalepa, Monika(2006). "Model of Strategic Preemption. Why Post-Communists Punish Themselves?" *paper presented at APSA annual meeting, Philadelphia, PA, August 21 - September 3* pp. 1-31
- Karstedt, Susanne(2002).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in Germany after 1945 and 1989: Public Judgements on Procedures and Justice." *Law and Policy*. 20/1. pp. 15-56.
- Kosař, David(2008). "Lustration and Lapse of Time: Dealing with the Past in the Czech Republic." *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4. pp. 460-487.
- Kunicová, Jana and Nalepa, Monika(2006).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Strategic Institutional Choice in Post-Communist Europe." *The UCLA Comparative Politics Workshop*. December 17. pp. 1-35.
- Moran, John(1994). "The Communist Torturers of Eastern Europe: Prosecute and Punish or Forgive and Forget?"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27/1. pp. 95-109.
- Munck, Gerald L. and Leff, Carol S.(1997). "Mode of Transition and Democratization: South America and East Europe in Comparative Perspectives." *Comparative Politics*. 29/3. pp. 346-366.
- Nedelsky, Nadya(2004). "Divergent responses to a common past: Transitional justice in the Czech Republic and Slovakia." *Theory and Society*. 33/1. pp. 65-115.
- Offe, C.(1996). *Varieties of Transition. The East European and East German Experience*. Cambridge: Polity Press.
- Oskar, N. T. Thoms, James Ron and Roland Paris(2008). "The effects of transitional

- justice mechanism.” *CIPS Working Paper*. pp. 1-91.
- Robertson, David(2006). “A Problem of Their Own, Solutions of Their Own: CEE Jurisdictions and the Problems of Lustration and Retroactivity.” in W. Sadurski. et al. eds. *Spreading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Impact of EU Enlargement on the Rule of Law,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n Post-Communist Legal Orders*. Dordrecht. pp. 73-96
- Rosenberg, T.(1995). *The Haunted Land: Facing Europe’s Ghosts after Communism*. New York: Vintage Books.
- Sadulski, Wojciech(2005). *Right before Courts. A Study of Constitutional Courts in Postcommunist Stat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MA: Springer.
- Skąpska, Grażyna(2003). “Moral Definitions of Constitutionalism in East Central Europe: Facing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International Sociology*. 18/1. pp. 198-218.
- Stan, Lavinia(2006). “The Politics of Memory in Post-Communist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Colloque Expériences et mémoire : partager en français la diversité du monde*. pp. 1-16.
- Szczerbiak, Aleks(2002). “Dealing with the Communist Past or the Politics of the Present? Lustration in Post-Communist Poland.” *Europe-Asia Studies*. 54/4. pp. 553-572.
- Welsh, Helga(1996). “Dealing with the Communist Past: Central and East European Experiences after 1990.” *Europe-Asia Studies*. 48/3. pp. 419-428.
- Šiklová, Jiřina and Havel, Václav(1999). “Lustration or the Czech Way of Screening.” in M. Krygier and A.W. Czarnota. eds. *The Rule of Law after Communism: Problems and Prospects in East-Central Europe*. Aldershot: Ashgate. pp. 248-258.
- “Act XXIII of 1994 on the Screening of Holders of Some Important Positions, Holders of Positions of Public Trust and Opinion-Leading Public Figures, and on the Office of History.”
- “Lustration Processes Over in Slovakia.” *ČTK Czech News Agency*. Sept. 29, 2000.
- “MVK Opinion Poll.” *ISI Emerging Markets*. March. 29, 2005.
- “Nohavica a StB: nová fakta.” *Lidové noviny*. Feb. 10. 2007.
- “Rada ČT podržela Janečka i bývalého milicionáře.” *Hospodářské noviny*. Feb. 22. 2007.
- “Slovak Parliament Approves Anti-Communist Law.” *OMRI Daily Digest*. Feb. 5.

1996;<http://www.rferl.org/newsline/1996/02/3-cee/cee-050296.html>

“Survey or Slovak Press.” *CTK Czech News Agency*. Dec. 28, 1993.

“Tošovský spolupracoval s StB.” *MF Dnes*. Feb. 12, 2007.

zákon 553/2002 o sprístupnení dokumentov o činnosti bezpečnostných zložiek štátu 1939 - 1989 a o založení Ústavu pamäti národa a o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zákon o pamäti národa).

Zákon č. 279/1992 Sb., o některých dalších předpokladech pro výkon některých funkcí obsazovaných ustanovením nebo jmenováním příslušníků Policie České republiky a příslušníků Vězeňské služby České republiky.

Zákon č. 451/1991 Sb., kterým se stanoví některé další předpoklady pro výkon některých funkcí ve státních orgánech a *organizacích České a Slovenské Federativní Republiky, České republiky a Slovenské republiky*.

<http://assembly.coe.int/Documents/WorkingDocs/doc96/EDOC7568.htm>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article.shtml?cmd%5B347%5D=x-347-559498>

<http://www.upn.gov.sk/>

www.tyden.cz/rubriky/domaci/dienstbier-tajna-sluzba-me-nikdy-ani-nekontaktovala_166771.html

<http://app.statistics.sk/volby2002/webdata/vysledky.htm>

<http://www.statistics.sk/> “Štatistický Úrad SR, Volby 1992, 1994, 1998, 2002, 2006.”

Abstract

Dealing with the past in Czech and Slovakia - focusing on the re-interpretation of 'lustration' -

Shin Kyu Kim*

Most of the post-communist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to deal with the past. Measures to deal with the past are classified into judicial proceedings on the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which were done by communist regimes, truth-findings, reparations to the victims and personal vettings on his or her past behaviours.

Although Czech and Slovakia had experienced common communist pasts from 1948 until 1989, they have been responding to the communist past quite differently.

In 1991, when the Czech and Slovakia was single state as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the federal parliament passed "Lustration law" to deal with the communist pasts. The aim of lustration law which was to vet high position officials whether they were agents or collaborators with communist secret police is to exclude some dubious high-positioned officials from their present and in the next some years positions.

After the break-up of a common state in 1993, Czech republic have been pursuing the lustration law vigorously, but Slovakia has little interest in dealing with the past and did not enforce the lustration law until it's expiring in 1996.

It was not until V. Mečiar was defeated in 1998 election that the dealing with past was started to be shown interest in public and political circles.

The dealing with the past has been enforced in Slovakia until the Nation's Memory Act which is on the disclosure of documents regarding the activity of state security authorities in the period 1939-1989 and on founding the Nation's Memory Institute (Ústav pamäti národa) and on amending certain acts (553/2002 zákon) was passed in the The National Council.

But in this case the Nation's Memory Act is not alike in character with the lustration law in the Czech Republic. In fact the Nation's Memory Act in Slovakia is not necessarily classified as lustration law which has been enforced in other post-communist countries.

* Researcher, East European and Balkan Institute.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If so, why the Czech Republic and the Slovakia have been responding to the dealing with the past so differently is the question in this article.

Although there are some factors why the Slovakia has pursued different measures to the past, I stress the two factors which have strong effects on the dealing with the past in Slovakia. Those are political games in Slovakia and different level of legitimacy on the communist regime between the Czechs and Slovaks.

After all, the character of communist regimes and the mode of transition from communist regime to democratic one are important factors to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s of lustration, but the specific political culture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dealing with the past and lustration in the Czech Republic and Slovakia.

■ 논문접수일 : 2010년 7월 2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5일